

# 속도 붙은 출생통보제...사각지대는 어찌나

### 복지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2236명 전수조사 실시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화 추진...익명출산 지원도 병원밖 출산 부작용 우려...“사회복지 체계 마련해야”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 살해 사건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과 임신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산모들이 병원이 아닌 읍지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2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 2236명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이 이중 위험도가 높은 1%인 23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의 영아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전수 조사에 본격 나설 경우 비슷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전당 TF를 꾸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태어날 경우 병원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보장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부모와 의사 모두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독

일은 부모와 병원이 출생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인해 출산과 임신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2021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출산의 비율이 99.8%로,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200건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를 보완하는 방안이라 두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면 시도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하지 않도록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시스의 통화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키트랙(Key-track)으로 가면서 임신 관련 갈등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임신 갈등 상담소’를 언급하면서 “상담소에서 임신부들이 상담 받거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연결을 시켜주기도 한다”며 “임신 12주 내 상담도 진행하면서 오히려 낙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음지로 내몰릴 수 있는 산모들을 최대한 양지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22개 단체)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부모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유나 기자



### 해경교육원, 경찰관 구조역량 강화 위한 '수영능력 평가' 실시

해양경찰교육원은 22일과 23일 양일간 교육원 내 실내수영장에서 경찰관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수영 능력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선욱 기자



### 광주 동부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및 사전교육

광주 동부소방서는 22일 광주천 상류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발대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슬비 기자



### 강진소방, 화목보일러 주택화재안전물품 설치

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화재안전물품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안전 서비스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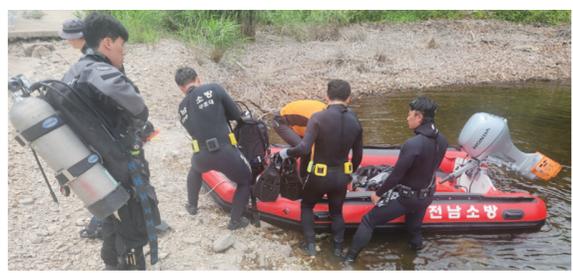
강진=김영일 기자



### 담양소방, 대형 재난 발생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담양소방서는 지난 20일 담양 청소년 수련원(담양군 수북면)에서 재난 대비 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진도소방, 여름철 수상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

진도소방서는 지난 20일날 태풍 및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진도군 관내에 위치한 사천2저수지에서 수상사고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 여수해경, 섬마을 텃밭 양귀비 적발돼 압수 폐기

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 수원 영아 살해 병원 기록에 '친부' 서명...영아 살해·유기 수사 박차

### 수원 영아 살해 후 냉장고 보관...친부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 진술해 최근 친모 출산 당시 병원 기록에 친부 서명 있는 것 확인...조사 예정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영아 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자와 여아였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3일 구속된 뒤에는 별도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는 A씨 체포 이후 '내내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 퇴원 서류에 B씨 서명이 기재된 점이 새

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C(20)씨와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를 받는 친부 D씨 관련 수사가 이어진다.

C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어난 아기는 여아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은 성인 남성과 여성 3명인데,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고등학생 나이에 아기를 낳고 친부인 D씨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C씨로부터 아기를 유기할 당시 D씨와 함께 갔다는 진술을 확보, D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C씨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 전환한 D씨 휴대전화도 곧 포렌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은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된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기 당시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추적하는 수사가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조사 일정이거나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로봇과 함께 뛰어노는 어린이들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로봇 그리고 인간: 로봇과 놀자' 행사를 찾은 어린이들이 사족보행 로봇과 뛰어노는 모습이다.

서선욱 기자

### 광주 영화관 폭발물 소동...수상한 가방 열어보니 공구만 가득

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에 수상한 가방이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4일 오전 10시 47분께 광주 광산구 주상복합 건물(대형 영화관 포함) 지하 주차장 기둥에 위험물물 의심되는 수상한 가방이 놓여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광주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등 28명과 소방관 20명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 뒤 폭발물 자동 탐지 장비로 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영사기 수리기사의 공구용 가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건물 입구 쪽에 수리기사가 놔둔 공구용 가방을 중년 여성이 쟁겨 주차장 기둥에 놓고 간 것으로 파악한 뒤 오전 11시 50분 통제를 해제했다.

서선욱 기자